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주요국 시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엔비디아 시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경제안보 연구동향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32조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확대
-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주요 기업, 과잉 경쟁 관련 조정 논의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김수연 전문관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01

1. 배경
2. 주요국 AI 정책·전략
3. 전망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안수린 전문관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12

1. 배경
2. 美측 동향
3. 中측 동향
4. 평가 및 시사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임산호 선임전문관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16

※ Frank Bickenbach, Holger Görg, Wan-Hsin Liu (2025.7.17.), “Transatlantic Ties beyond Goods Trade :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EU-U.S. Services Trade”, Kiel Policy Brief,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1. 개요
2. EU-미국 서비스무역 현황
3. 향후 EU-미국 협상을 위한 서비스무역 관련 정책 제언
4. 시사점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32조 관세 대상 철강·루미늄 파생제품 확대
-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주요 기업, 과잉 경쟁 관련 조정 논의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전문관

■ 배경

-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주요국 정부·기업은 AI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전략 재편 중
 - AI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며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 균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
 - AI 기술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각국은 자국 규범을 국제표준으로 확산하려는 경쟁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해 AI 안전성 등을 관리하며 국제 거버넌스 강화
-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 위험 관리, 인재 양성,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정책·전략을 재편 노력 중

■ 주요국 AI 정책·전략

국가	AI 정책·전략
미국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윤리 기반 접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인프라·수출 전략 중심으로 전환
EU	규제 선도를 바탕으로 인프라·투자·인재 등 대륙 차원의 혁신을 결합해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추진
영국	혁신 친화적 기초 속에서 소버린 AI 육성과 국가안보 중시 및 제도 보완 움직임
프랑스	연구·중소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소버린 AI 육성 및 AI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 거버넌스 참여 확대
일본	AI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 유연한 'soft-law' 접근 하에 거버넌스 마련 및 국제 규범 수립 주도 노력
중국	국가 주도로 AI 기술 자립과 산업적용을 강화하며 오픈소스 기반의 주권·포용·공정 가치를 앞세워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려는 전략

■ 전망 및 시사점

- AI 기술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 ▲리스크 대응 ▲인프라 투자·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 통합·다층적 접근을 전개 중
 - AI 안전성, 공급망·인프라, 국제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공통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기술 패권 경쟁, 윤리·규제, 데이터·오픈소스 측면에서 갈등 요인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소버린 AI와 인프라·인재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와 국제협력에 기반해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를 동시에 확보 필요
 - * 각 국가가 자체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 국가나 지역의 제도, 문화, 역사,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1. 배경

-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주요국 정부·기업은 AI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전략 재편 중
 - 생성형 AI, 멀티모달 모델* 등의 등장과 기술 상용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산업, 노동, 안보 등 사회 전 영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 확산
 - *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이해하는 AI 모델
 -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 위험 관리, 인재 양성,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정책·전략을 재편 노력 중
- AI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며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 균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
 -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대응이라는 두 축이 공존함에 따라, 주요국은 AI 정책을 단순 기술 육성이나 규제에 치중하지 않고 다층적·통합적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노력 중
 - 산업 육성을 위해 AI 칩,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 국제 경쟁력 확보 정책 추진
 - 아울러 딥페이크, 저작권, 윤리 등 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법령 개발·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등 국가별 조치 수행
- AI 기술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각국은 자국 규범을 국제표준으로 확산하려는 경쟁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해 AI 안전성 등을 관리하며 국제 거버넌스 강화
 - 기술 경쟁, 윤리·안전 기준, 산업 정책이 연결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AI 정책을 조율하며, 국제표준·가이드라인 개발과 다자협의체 참여 등 다양한 움직임 전개

2. 주요국 AI 정책·전략

- (미국)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윤리 기반 접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인프라·수출 전략 중심으로 전환
 - (기존 AI 정책 철회) 트럼프 대통령,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 발표(2025.1.23.)
 - * (EO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주요 내용) ▲기존 AI 안전·규제 정책 폐지 ▲‘AI Action Plan’ 수립 지시(180일 내)

- **(AI 행동계획*)** ①혁신 가속화 ②미국 AI 인프라 구축 ③국제 외교 및 안보 선도 등 3대 필라로 구성된 AI 행동계획 발표(2025.7.23.)

*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 (목표) AI 분야 리더십 확보를 통해 인류 발전, 경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안보 달성

- **(혁신 가속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표현의 자유·미국적 가치 수호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장려 ▲AI 도입 활성화 ▲美 노동자 역량 강화 ▲AI 기반 과학연구 지원 ▲AI 평가 생태계 구축 등
- **(미국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확충 ▲국산 반도체 제조 복원 ▲높은 보안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AI 인프라 인력 양성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등
- **(국제 외교·안보 선도)** ▲미국산 AI 기술 수출 확대 ▲중국의 국제 AI 거버넌스 개입 견제 ▲중국 대응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보완 ▲AI 모델 국가안보 리스크 평가 ▲바이오 보안 투자 등

- **(후속 행정명령)** AI Action Plan 발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개의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 (2025.7.23.)

- **(AI 인프라 신속 구축*)**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일부 예외 적용 ▲전력망 강화 ▲금융 지원 ▲상시 공급 가능 전원(천연가스·석탄·원자력 발전·지열 등) 우선 등

* (EO 14318)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 **(편향 없는 AI*)**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정확성·신뢰성·이념적 중립성을 필수 기준으로 설정 ▲다양성·형평성·포용 기준 삭제 ▲평가 의무화 등

* (EO 14319)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 **(국제 수출 전략*)** ▲AI 풀스택 수출 패키지** ▲미국 중심의 국제표준 주도 ▲AI 수출을 외교·안보 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우방국 수출 절차 간소화 ▲AI 기반 국제 안보·산업 협력 강화 등

* (EO 14320)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 우방국을 대상으로 AI 모델, 소프트웨어, 반도체·하드웨어, 보안·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수출 지원

- **(Stargate 프로젝트)**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MGX가 참여하는 대규모 AI 합작 투자 계획인 Stargate 발표(2025.1.21.)

- **(주요 내용)** 미국 내 최소 10개의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 투자 및 초기 1,000억 달러 즉시 집행
- **(현황)** 부지, 전력, 기업 간 의견조율 등의 문제로 초기 계획 대비 지연 중이나 日 소프트뱅크는 8월 8일 대만 폭스콘의 美 오하이오 공장 부지를 인수

※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8월 19일 소프트뱅크-폭스콘이 각각 50%씩 출자한 합작 회사를 설립해 AI 데이터 센터 장비를 생산할 예정이라 발표(건물·토지는 소프트뱅크가 100% 출자)

■ (EU) 규제 선도를 바탕으로 인프라·투자·인재 등 대륙 차원의 혁신을 결합해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추진

- (EU AI 법^{*})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통해 AI 시스템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Regulation (EU) 2024/1689) Official Journal Version of 13 June 2024

※ 2024.8.1. 발효되어 2025.2월부터 금지 조항 적용, 8월부터 범용AI(GPAI) 모델 규제 시작

-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금지, 민주주의, 법치 존중 등 EU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로 사용 자체가 금지
- (고위험)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필수 서비스, 법 집행, 이주 및 사법 등에 사용되는 AI로 시장 출시 전 위험성 평가, 관리감독, 정보제공 등 엄격한 의무 부과
- (제한된 위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 중 딥페이크와 같이 비인격화, 기만, 조작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로 투명성 의무 등 부과
- (저위험)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작성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

- (EU AI 사무국^{*}) EU 집행위원회 산하 AI 사무국 설치(2024.2.21.)

* EU AI Office

- (주요 임무) ▲ EU AI 법 집행·감독 ▲ 범용 AI 감독 ▲ 표준화(美 NIST와 유사) 및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 국제협력(EU AI 법 규범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으로 확대 노력)
- (동향) EU AI 법 2단계 시행(발효 1년)에 따라 8월부터 AI 사무국의 정식 감독 권한 발동 및 본격적으로 규제 집행 예정^{*}

* ▲ 금지 AI(2025.2월) ▲ 범용 AI(2025.8월) ▲ 고위험 AI(2026.8월) ▲ 범용 AI 의무 준수(2027.8월)

- (범용 AI 행동강령^{*}) EU 집행위, AI 법 범용 AI 규정 시행(2025.8.2.)에 앞서 기업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 및 조치를 담은 동 행동강령 발표(2025.7.10.)

* (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동 행동강령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발적 참여를 권장 /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명성 및 저작권 준수 등 AI 법의 의무 준수 필요

- (주요 내용) ▲ 투명성(학습 데이터 요약본 공개, 모델 관련 설명,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조치 보고 등) ▲ 저작권 보호(저작권 데이터 사용 내역 공개, 삭제·차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안(모델 오용·남용 방지 대책, 레드팀 도입, 외부 검증 및 사고 대응 체계 등)
- (준수 현황) 현재 구글, MS, 아마존, 엔트로픽, 오픈AI, 미스트랄AI 등 26개社 서명

※ xAI의 경우 안전·보안 챕터에만 서명

- (AI 대륙 행동계획^{*}) 혁신과 규제를 병행하여 유럽의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동 행동계획 수립·발표(2025.4.9.)

* AI Continent Action Plan

- (주요 내용) ▲컴퓨팅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접근 확대 ▲전략적 AI 도입 촉진 ▲AI 인재 양성 ▲규제 간소화 등 5개 핵심 영역별 세부 정책 제시

* 2026년까지 EU 전역에 13개 AI 팩토리 배치 및 최대 5개 기가팩토리(AI 팩토리 보다 4배 이상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갖춘 대규모 시설) 구축

- (투자 규모) 2,000억 유로 목표(1,500억 유로 민간투자 + 500억 유로 EU 공공자금)

※ ‘InvestAI 이니셔티브’를 통한 기가팩토리 지원 등

■ (영국) 혁신 친화적 기조 속에서 소버린 AI 육성과 국가안보 중시 및 제도 보완 움직임

- (AI 기회 행동계획*) 과학혁신기술부, ①AI 기반 마련 ②AI 도입으로 삶의 질 개선 ③국산 AI 강화 등 3대 전략 축 기반 50가지 권고사항 중심의 행동계획 발표(2025.1.13.)

*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정부 AI 기회 고문인 Matt Clifford(국제 인재 투자기관 Entrepreneurs First 회장) 개발

- (AI 기반 마련) ▲AI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부문 데이터 자산 활용* ▲차세대 AI 인재 육성 ▲규제, 안전·보증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 및 도입 지원 등

* National Data Library 구축

- (AI 도입)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 ▲공공·민간 부문 AI 도입 협력 ▲민간 부문 AI 도입 장벽 해소 등

* Scan → Pilot → Scale 접근방식 채택을 통한 유연하고 신속한 접근

- (영국 주권 AI 개발) AI Maker로 발돋움하기 위해 UK Sovereign AI 부서* 설립

* (역할)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과 학계가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국제협력, 합작투자, AI 기업 투자·육성 등 역량 강화 지원

- (AI 보안연구소*) AI 안전연구소(2023.11.2. 설립)를 AI 보안연구소로 개편하여 국가안보 및 범죄 등으로 연구 중심 방향을 전환(2025.2.14.)

- 기존의 윤리, 편견, 표현의 자유가 아닌 AI 기술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에 관한 연구로 전환하여 사이버보안과 국가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

※ 일각에서는 AI 안전보다 기술혁신과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정책 변화 양상이라고 해석

- (AI 규제 법안*) 통일된 AI 법·제도 대신 기존 감독기관들이 각자 AI를 규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AI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재발의(2025.3.4.)

*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

※ 2023년부터 신규 AI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감독기관이 각자 AI를 규제하는 분산된 관리 체계(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2023.8.8.))를 택했으나, 최근 규제 공백 우려 및 국제 경쟁력·정합성을 사유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 확산

- (동향) 정부는 AI 규제 법안을 최소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 / 안전, 저작권 관련 등 더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다음 의회 세션에 도입할 예정(The Guardian, 2025.6.7.)

■ (프랑스) 연구·중소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소버린 AI 육성 및 AI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 거버넌스 참여 확대

- (2단계 국가 AI 전략*) 연구 중심의 1단계 국가 AI 전략**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AI 경제 및 응용에 중점을 둔 2단계 전략(2021-2025) 발표(2021.11.8.)

* (National Strategy for AI-Phase 2, 2021-2025) “France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채택

** (AI for Humanity) 프랑스 최초의 국가 AI 전략(2018.3.29.)

- ①IA-Cluster ②IA-Booster 두 축을 기반으로 ▲국가 역량 강화 ▲임베디드 AI* 및 신뢰 가능한 AI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AI의 경제 통합 가속화 등을 추진

* (Embedded AI)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하드웨어 기기 자체에 AI 모델을 내장하여 자체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

- (IA-Cluster) 프랑스 교육 및 연구센터를 AI 전문분야의 국제 허브로 전환

※ 2025년까지 ▲2,000명 이상의 기술전문대학·학사·전문학사, 1,500명의 석사 양성 및 200명 이상의 박사 양성
▲글로벌 AI 분야 Top 대학 1개 이상 선정 ▲2024년 1월까지 저명한 해외 과학자 15명 영입

- (IA-Booster)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 도입 지원

- (AI 행동 정상회의*)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및 프랑스의 AI 분야 국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비전·투자계획 등을 담은 문서**를 정상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2025.2.11.)

* AI Action Summit(프랑스 파리, 2025.2.10.~11.)

** Make France an AI Powerhouse

- (주요 내용) ▲AI 선도국으로서의 프랑스 입지 ▲AI 스타트업 및 연구 클러스터 ▲AI 인력 및 인프라 확대 전략 ▲INESIA* 설립 ▲AI 교육 및 인재 유치 전략 ▲해외 AI 인프라 투자 ▲국제협력 및 공공 이익 AI 재단 설립 등

* National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and Secur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일본) AI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 유연한 ‘soft-law’ 접근 하에 거버넌스 마련 및 국제 규범 수립 주도 노력

- (AI 추진법*) AI 기술의 연구개발·활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최초 AI 기본법인 AI추진법 발표(2025.6.4.)

* (AI Promotion Act)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related Technology

- (주요 내용) ▲국제 경쟁력 제고 ▲포괄적·체계적인 개발·활용 촉진 ▲절차 투명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AI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무 규정

- (AI 기본계획 수립) 내각은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방침, 정부 조치,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한 AI 기본계획 수립 필요

- (AI 전략본부* 신설) AI 전략본부를 설립하여 AI 기본계획 작성 및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관련 주요 조치 계획, 입안 및 조정업무 등 수행

* (AI Headquarters)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담당 및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

- 동 법은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연성 규범(soft-law) 접근을 채택,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처벌 규정은 미포함

- (AI 촉진법 부속 결의안) AI 촉진법 가결과 동시에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대응 및 윤리 원칙을 위한 부속 결의안 채택

- (주요 내용)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확립 ▲AI 악용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 마련 ▲AI 리스크 평가 및 실태조사 ▲고위험 AI 기술 발전 동향 파악 및 규제 수단 검토 ▲민간 자율적 노력 존중 등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일본의 G7 의장국 수입 당시, 첨단 AI 시스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출범(2023.5.)

- (Friends Group) 히로시마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49개국 및 지역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력체 출범(2024.5.2.)

■ (중국*) 국가 주도로 AI 기술 자립과 산업적용을 강화하며 오픈소스 기반의 주권·포용·공정 가치를 앞세워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려는 전략

*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참고(경제안보 Review 25-04호, 250228)

- (차세대 AI 발전 계획 및 후속조치) 2030년까지 AI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단계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차세대 AI 발전 계획 발표(2017.7.)

- (주요 내용) ▲AI 기술 주도 산업·경제 발전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장 중심 발전 ▲오픈소스 협력 등

- 동 계획 후속조치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별 세부 행동계획 수립 및 발표

- (AI+ 이니셔티브) 국무원 정부업무보고서에 ‘AI+ 행동’이라는 용어가 기록 및 제안(2024.3.) / 리창 총리,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 및 데이터 개발·개방·유통·사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발표

- (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 AI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표준화 체계 설계와 제도적 기반 정립 등 내용을 담은 지침 발표(2024.6.5.)

- (목표) 2026년까지 ▲50건 이상의 국가·산업표준 제정 ▲표준 활용 기업 1,000개 이상으로 확대 ▲20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

-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2023년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안 (2023.10.18.)

- (주요 내용) ▲오픈소스 기반 AI 접근 강화 ▲각국 주권 존중 및 법규 준수 ▲AI 악용 방지 ▲인류 공동 가치 수용 ▲모든 국가의 동등한 권리 ▲투명성·책임성 등

-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 2025.7월, 중국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계기,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 발표(2025.7.26.)
 - (주요 내용) ▲AI 인프라 ▲안전성 ▲개방성·협력 ▲윤리적·법적 프레임워크 ▲산업적용 및 국제표준화 추진 등 분야 13개 실행 전략 등 AI 거버넌스 구상 제시
 - ※ AI를 인류에 유익한 국제 공공재로 보고, ▲주권 존중 ▲공정·포용 ▲개방적 협력 등 가치를 강조했으며 UN 연계 국제 디지털 협약 이행 등 UN 기반 국제협력 촉구
 - 리창 총리는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AI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 *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120여 개발도상국

3. 전망 및 시사점

- AI 기술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 ▲리스크 대응 ▲인프라 투자·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 통합·다층적 접근 전개
 - (기술 경쟁력 확보) ▲민간·정부 R&D 투자 확대 ▲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 (리스크 대응)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마련 ▲가이드라인, 평가 체계, 감독 메커니즘 개발 ▲공공 데이터 활용 등 사회적 신뢰 확보 등
 - (인프라 투자·산업 육성) ▲AI 인프라(데이터센터, AI 칩, 클라우드 등) 조성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등
 - (국제협력) 국제표준화기구 및 다자협의체(AI 정상회의, G7 등)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국제 거버넌스 영향력 확보 및 기술·규범 경쟁 대응
- 각국 정부는 AI 안전성, 공급망·인프라, 국제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공통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기술 패권 경쟁, 윤리 등 규제, 데이터·오픈소스 발전 측면에서 갈등 요인 존재
 - (미·중 AI 패권경쟁) 미국은 혁신·인프라·수출 중심 전략과 동맹국 기술 블록 구축을 노력 중이며 이에 중국은 국가 주도형 AI 자립 및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으로 대응
 - 이는 양국의 AI 칩·핵심광물 수출통제 및 자국 가치를 반영한 국제 거버넌스 확장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AI의 군사 활용 가능성 증가에 따라 미중 경쟁 심화 전망
 - (규제·윤리 측면 불일치) 국제 AI 규범 설정 과정에서 EU의 안전·윤리·인권 중점 규제 법제화 노력과 미국, 중국 등의 유연한 규제 및 산업 중심 전략 등의 충돌 가능성 불배제

- (데이터·오픈소스) 국가별 데이터 자원 전략·보호조치 등 차이, 오픈소스 안전·규제 문제 및 이와 관련된 표준화 주도권 측면에서 경쟁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소버린 AI와 인프라·인재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와 국제협력에 기반해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소버린 AI 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및 정부·기업 등 AI 활용 확대 추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인프라 구축 필요

- 국산 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비판적 의견도 있으나, AI 기술은 산업 육성을 넘어선 경제안보적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ZDNET Korea, 2025.7.28.)

- 빠른 기술 발전 속도 등 AI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지속적 소통·협력을 토대로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필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1.21.)

- 고성능 AI 칩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 및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국내 인재 양성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AI 인재 정책 추진

- AI 정상회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산업에 유리한 규범·혁신 균형안 제시

- 기술적으로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전문가, 의장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인증 체계와 국제표준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발전과 함께 표준화를 함께 개발하는 선제 표준화 메커니즘 구축 필요

참고문헌

- 김수연. (2025.2.28.).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경제안보 Review. 25-4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6.23.). 일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6.10.). 일본: AI 전략 수립 및 정책 체계 정비를 위한 AI 촉진법 제정.
- 법률신문. (2025.6.12.). 새정부의 AI 정책 로드맵.
- 김수연. (2025.2.28.).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경제안보 Review. 25-4호
- 한정호. (2025.8.1.). 소프트뱅크, 폭스콘 오하이오 전기차 공장 인수…‘스타게이트’ AI 거점 확보. ZDNET KOREA.
- 김철문. (2025.8.19.). 폭스콘 “소프트뱅크와 미국에 AI데이터센터 설비기지 건립”. 연합뉴스.
- 윤고은. (2023.10.19.). 中, 美제재 확대하자 “모든 나라 AI 개발 동등 권리·기회” 촉구. 연합뉴스.
- 나주예. (2025.7.27.). 중국, 미국 이어 ‘AI 행동계획’ 발표…AI 패권경쟁 본격화. 한국일보.
- 유진우. (2025.7.29.). 美·中 ‘AI 제국’ 두고 동상이몽…트럼프 ‘우리 편 먼저’ 對 시진핑 ‘글로벌 연대’. 조선일보.
- 이광욱, 이근우, 이수경, 정호선, 유현상, 강석준. (2025.6.12.). 새정부의 AI 정책 로드맵. 법률신문.
- 조이환. (2025.7.28.). [AI는 지금] ‘소버린 AI’를 보는 두 시선…정부 ‘주권’ vs 업계 ‘시장’
- White House. (2025.1.23.). EO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White House. (2025.7.23.).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 White House. (2025.7.23.). EO 14318: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 White House. (2025.7.23.). EO 14319: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 White House. (2025.7.23.). EO 14320: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 OpenAI. (2025.1.21.). Announcing The Stargate Project.
- European Commission. (2024.6.13.). Artificial Intelligence Act (Regulation (EU) 2024/1689)
- European Commission. (2024.2.21.). Commission Decis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AI Office.
- European Commission. (2025.7.10.). 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 European Commission. (2025.4.9.). AI Continent Action Plan.
- UK DIST. (2025.1.13.).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 UK DIST. (2025.2.14.). Tackling AI Security risks to unleash growth and deliver Plan for Change.
- E. Courea & K. Stacey. (2025.6.7.). UK ministers delay AI regulation amid plans for more ‘comprehensive’ bill. The Guardian.
- A. Kasavina. (2023.8.8.). France – National Strategy for AI. EU Digital Skills & Jobs Platform.
- AI Action Summit. (2025.2.11.). Make France an AI Powerhouse.
- AI Action Summit. (2025.2.11.). AI Action Summit: Ensuring the development of trusted, safe and secure AI to benefit of all.
- 日 내무성. (2025.5.28.). Outline of the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related Technology.
- 中 외교부. (2023.10.20.). Global AI Governance Initiative.
- 中 외교부. (2025.7.26.). 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

저자 소개

김수연 | syekim23@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AI 거버넌스, 핵심·신흥기술 및 규범, 기술혁신·보호, 수출통제, 국제표준이다. 주요 연구로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경제안보리뷰 25-4호(2025) 「美 우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4-22호(2024), 「4차산업에서 재료와 표준」(2023), 「수출통제총람」(2021, 2018)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Degradation behaviours of Fe-doped $\text{La}_{0.8}\text{Sr}_{0.2}\text{CoO}_{3-\delta}$ by thermal stress,” *Advances in Applied Ceramics* (2018) 등이 있다.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안수린 전문관

1. 배경

- 엔비디아·AMD社は AI 칩(H20* / MI308)의 對中 수출 재개 허가 조건 下, 美 정부에 상기 AI 칩의 판매 수익(revenue) 15%**를 납부하기로 합의(8.6)

* 對中 수출용 저사양 AI 칩으로 개발되었으며, 中 딥시크(Deepseek) 등 AI 모델 학습에 사용

** 금년 H20은 150억불, MI308은 8억불 판매 / 美 정부에 약 20억불(약 2조7,700억원) 납부 전망

※ 미국의 對中 AI 칩 수출통제 동향 : 엔비디아 고성능 칩 H100 수출통제('22.10월) → 하위 호환 칩 H800 수출통제('23.10월) → H100의 저사양 버전인 H20 수출통제('25.4월) → H20 對中 수출 재개 발표('25.7월) / 실제 라이선스 발급은 금번 15% 수익 배분 합의 직후 8.8일 시행

- 성능 순위 : H100 > H800 > H20 (H20은 H100 연산 능력(AI 학습속도)의 5분의 1 수준)

- (엔비디아社) 정부와의 수익 분배로 비용 상승 불가피, 최근 H20 판매 가격 약 18% 인상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8.19)

※ 가격 인상 시 대만 위탁 제조업체들(미택, 인벡 등)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

2. 美측 동향

- (정부) 레빗 백악관 대변인, 현재 상무부가 동 합의의 합법성, 매커니즘 등을 조율중이라고 언급(8.12) / 베센트 재무장관, 금번 '수익 배분 합의'가 여타 산업 부문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시사(8.13)

※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H20 칩은 무제한 판매가 아닌 개별 심사 후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는바, 상무부는 고객 식별, 밀수 방지 등의 보호 조치 도입 예정 발언(8.1)

- (의회) 수출 규제를 수익 배분과 연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앞 반대 서한 발송(8.17)

- 정부가 자국 기업에 돈을 받고 수출 허가를 내주는 상황 이례적 / 美 국가안보가 대가만 주어진다면 협상(pay-to-play)될 수 있다는 신호 발송 우려

※ 존 몰레나르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공화), "중국이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판매를 허가하고 대가를 받는 전례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 /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민주), "수출통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험한 남용"이라고 비판

참고

법적 쟁점

- 美 정계는 동 합의를 사실상 수출세(‘export tax’) 부과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 / 단, 현행 美 국내법상, 동 합의를 실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
 - 「수출통제개혁법(ECRA)」內 수출 허가 신청 관련 수수료(fee) 부과 금지 규정
 - 美 헌법 제1조9항제5호 “어떠한 주(州)도 수출 물품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고 명시
 - 다만,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대만에서 수출 시 위헌이 아닐 가능성

3. 中측 동향

- 中 사이버안보국(CAC), 엔비디아社측에 H2O 칩 내 추적 기능 또는 백도어*(backdoor) 보안 문제 제기** 및 증명 자료 제출 요구(7.31)

* 정부나 해커가 기기 내부에 숨겨진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작 가능

** 美 상원,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위치 추적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안 既 발의(5.29)

- 中 당국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CNBC, 7.15)*을 두고 자국에 대한 명백한 모욕(insulting)으로 간주, 이후 보안상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H2O 사용 자제 권고 통지문 발송(7.31.)

※ 블룸버그통신, 엔비디아측, 중측의 (자국 기업 대상) 구매 제한 움직임에 따라 (H2O 관련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애플테크놀로지 등 부품 생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8.21.)

4. 평가 및 시사

- (美 H2O 수출 재개 배경) ▲저사양 AI 칩 판매를 통해 중국의 美 기술 의존을 유지하고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완화하는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금번 제한적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베센트 재무장관, “H2O 칩은 엔비디아 제품군 중에서도 저사양에 해당, 국가안보 위협 저조 / 글로벌 사우스 포함한 전 세계에서 美 기술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게 할 중요성 강조”(8.19, Fox News)

- 다만, H2O 수출 재개와 관련해 美(엔비디아 포함)·中 모두 구체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공급만 전반 중장기적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多

※ 美 정부, H2O 수출 통제('25.4월) → 수출 재개(7월) → 中 정부, H2O 사용 자제 권고(7월) 및 (中 기업, 엔비디아 칩 사용 불가피 입장) → (외신 보도) 엔비디아측, H2O 관련 부품 생산 중단 요청(8월)

■ **(우리 기업 시사점) 엔비디아는 H2O 이후 中 전용 B30A* 개발 추진 중으로 향후 AI 칩 수요 확대에 따른 HBM 공급 기회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이 8.11일 “차세대 AI칩 블랙웰(B300) 성능을 30~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중국과의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 감안 시, 中 수출 전용 B30A는 B300 성능의 약 절반 수준

● 최근 엔비디아가 일부 협력사에 H2O 부품 생산 중단 요청했다는 보도는 ▲(中 정부의 구매 제한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공급 조정 ▲(국내 메모리·패키징 업체에) 단기적 생산 차질·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엔비디아가 15% 수익 배분 합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BM 공급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간 가격 경쟁 유도 및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압력 행사 가능성* 불배제

* 엔비디아는 AI 칩 판매가 18%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년 매출 총이익률 소폭 하락(71%→69%) 전망

참고문헌

- Bloomberg. (2025.8.22.). Nvidia Asks Suppliers to Halt H20 Work, Information S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8-22/nvidia-asks-suppliers-to-halt-work-on-h20-chip-information-says>
- Financial Times. (2025, August). Nvidia and AMD to pay 15% of China chip sale revenues to US government. <https://www.ft.com/content/cd1a0729-a8ab-41e1-a4d2-8907f4c01cac>
- Financial Times. (2025, August). China turns against Nvidia's AI chip after 'insulting' Howard Lutnick remarks. <https://www.ft.com/content/b8e30c54-b71c-4113-8b3e-8f54bc36587d>
- Reuters. (2025.8.12.). Trump's unusual Nvidia deal raises new corporate national security risks.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trumps-unusual-nvidia-deal-raises-new-corporate-national-security-risks-2025-08-12/>
- 경향신문. (2025.8.11.). “중국 수출 허용 대가로 수익 15% 정부에 납부”...엔비디아, 트럼프와 ‘이례적’ 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11436001>
- 뉴스1. (2025.8.19.). "엔비디아, 중국 수출 'H20' 가격 18% 인상 가능성."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884106>
- 뉴시스. (2025.8.19.). 트럼프 '수출통행세'...엔비디아, 공급망에 가격인하 요구할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9_0003295688
- 연합뉴스. (2025.8.6.). 엔비디아, 中 보안우려 제기엔 "칩에 '킬스위치·백도어'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028900091>
- 연합뉴스. (2025.8.9.). 美상무부, 엔비디아 H20 AI칩 中수출 허가 발급 개시.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9019000009>
- 인포맥스. (2025.8.13.). 백악관, 엔비디아식 수출세 "다른 기업에 확대될 수도"(상보).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518>
- 한국경제. (2025.8.1.). H20칩 '백도어' 의심하는 中...문제 없다는 엔비디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169121>
- 한국무역협회(2025.8.12.) Nvidia-AMD 對中 매출 15% 납부 합의 관련 논란 확산.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 미중 기술 경쟁, 신형안보기술,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미국 상무부의 (AI)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통제,”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위협 인식,” “미국의 수출통제 효과성 및 역효과” 등이 있다.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임산호 선임전문관

※ 원문 : Frank Bickenbach, Holger Görg, Wan-Hsin Liu (2025.7.17.), “Transatlantic Ties beyond Goods Trade :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EU-U.S. Services Trade”, Kiel Policy Brief,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1. 개요

-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EU와 미국의 무역 협상 시 상품무역과 함께 서비스무역도 고려되어야 하며, EU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해 미국에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라는 유화책을 제시(당근)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강화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채찍)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EU-미국 간 갈등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EU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유럽 싱크탱크의 분석을 소개하는 데 의의

*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NTE) 보고서는 ▲데이터 현지화 ▲위치기반 데이터의 이전 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사용료 등을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제기(USTR, 2025.4월)

2. EU-미국 서비스무역 현황

-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품무역(Trade in Goods) 적자를 상호관세 부과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EU 관계에서 미국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인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에 대한 고려는 미미하다고 분석

* 2024년 미국은 對EU 상품무역에서는 1,974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對EU 서비스무역에서는 1,48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Eurostat 기준). 2014~2024년 동안 미국의 對EU 서비스무역 흑자(+450%)는 동기간 미국의 對EU 상품무역 적자(+103%)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 오늘날 서비스무역 규모는 상품무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서비스무역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

1) 비즈니스포스트(25.8.20), ‘미국 IT 업계 한미정상회담 맞아 공개서한, “한국 디지털무역장벽‘ 해소해야’”; 한국경제신문(25.7.3), ‘한미협상 쟁점 된 '온플법'…美 하원의원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 요구" 서한’

- 미국의 對EU 서비스수지 흑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로 그중에서도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Eurostat 통계 기준)

*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경영 자문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 무역 관련 서비스 등),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시청각 관련 서비스, 헬스·교육 서비스 등)로 구성 (보고서 본문 중 Table 1 참조)

- Eurostat에 따르면 미국-EU 서비스무역에서 EU의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 부문 적자는 2021년 1,091억 유로에서 2023년 1,447억 유로로 꾸준히 확대

● 그러나 집계 방식과 범위의 상이함으로 EU 통계기관인 Eurostat와 미국 상무부 산하 BEA(경제 분석국)의 서비스무역 규모 추정 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발생

* 2024년 미국의 대EU 서비스무역 흑자 규모는 Eurostat(EU) 1,480억 유로, BEA(美) 699억 유로로 측정했으며, 미국의 대EU 상품무역 적자는 Eurostat(EU) 1,974억 유로, BEA (US) 2,187억 유로로 측정

[EU-미국의 서비스무역(위) 및 상품무역(아래) 비교]

Figure 1a: EU-U.S. Total Services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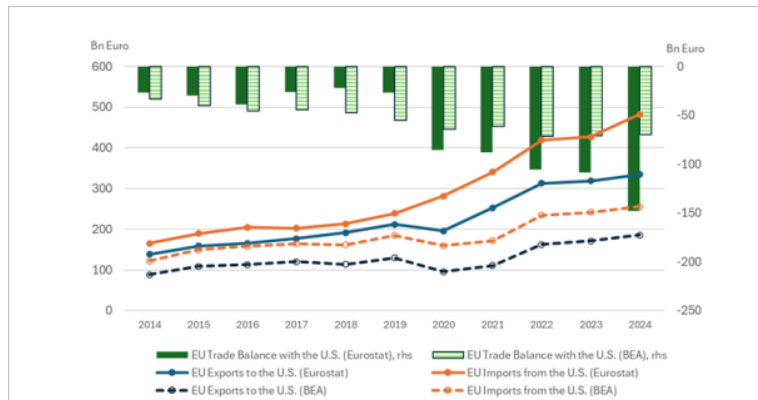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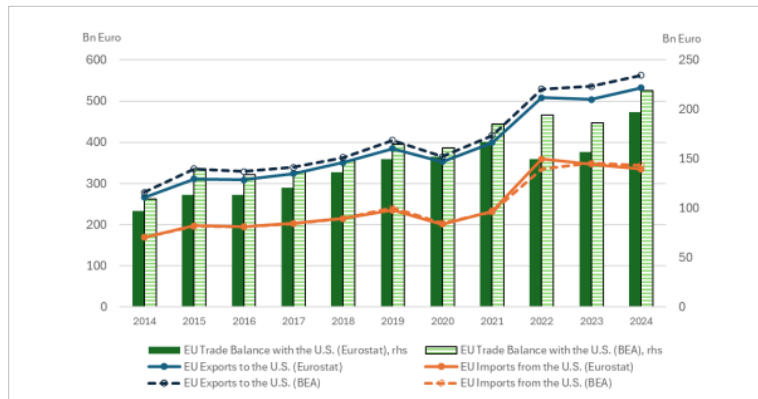


Figure 1b: EU-U.S. Total Goods Trade



참조: 서비스무역(위) 그래프의 오른쪽 축이 EU의 對美 서비스무역 적자 규모를 의미. 상품무역(아래) 그래프의 오른쪽 축이 EU의 對美 상품무역 흑자 규모를 의미. 그래프 속 실선은 Eurostat(EU) 집계 데이터, 점선은 BEA(美) 집계 데이터 의미

자료: 보고서 원문 중 Figure 1에 해당

- 이러한 불일치는 서비스무역 측정이 상품무역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이며, 국제적으로 서비스 무역 통계측정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기 때문

※ 정책 자문에 긴급히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불일치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도 시급

● 미국의 對EU 서비스무역 흑자 대부분은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에 의한 것이며, EU 회원국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가장 큰 비중

* EU-미국 서비스무역에서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기준 77.2%에 이릅니다(Eurostat 기준). Eurostat은 2023년 미국의 對EU 디지털서비스 흑자 중 아일랜드의 비중이 98.9%에 이른다고 추산(반면, 미국의 BEA는 아일랜드 비중이 54.6%라고 추산해 상당한 괴리 존재)

- 아일랜드는 기업 친화적 법인세 제도, EU 역내 서비스 공급의 원활성, 영어 사용 등 강점을 바탕으로 Google, Microsoft, Meta 등 다국적기업을 유치

-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IT 기업이 미국 본사에 미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미국의 서비스무역 흑자 요인으로 주장

● 한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미국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디지털·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운영 서비스 등)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공급한 서비스’로 별도 분석 (외국계 현지법인의 현지 판매는 BOP(국제수지)가 아닌 FATS(외국계 기업 통계)에서 집계)

-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아일랜드를 허브로 EU 역내외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 중인데, 이렇게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공급하는 서비스’는 국제통계상 미국의 서비스무역 수출로 반영되지 않지만 EU-미국의 경제관계에서 상당한 비중 차지

*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계 현지 법인들의 아일랜드 외 고객 비중은 73% 이상

- 그 예로 독일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한 미국 IT 기업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는 독일-아일랜드 무역에서 아일랜드의 서비스수출로 집계 → 독일은 아일랜드와의 서비스무역에서 적자, 미국과의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 형성

● 즉, 국제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측정에 한계가 있고 조세나 정책 변동에 따라 우회가 용이한 서비스무역의 특성상 상품수지 또는 서비스수지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한계 존재

3. 향후 EU-미국 협상을 위한 서비스무역 관련 정책 제언

● 보고서는 EU가 미국과 협상시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무역까지 고려하도록 논의를 확장해야 하며, 상품무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EU-미국 무역의 중요한 측면인 서비스무역을 간과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

- 상품무역 외 서비스무역까지 고려하면 미국 무역적자 규모도 크게 축소 가능

- EU와 미국 간 무역 데이터의 상당한 불일치를 감안해, 협상 과정에서 공동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필요 제기

- 한편, EU가 미국 측에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양보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에서 제시 가능한 제안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 EU는 유화책으로 미국 행정부가 제기한 서비스무역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디지털전송가능서비스 무역에서 EU의 시장 추가 개방 의사를 제시 가능
 - *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서비스무역 장벽에는 ▲EU 디지털 관련 규제들의 과도한 준수 요구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관행의 미비 등이 포함
- EU는 위협 수단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방안과 EU 차원의 디지털서비스세 (Digital Service Tax, DST)* 도입이 거론
 - *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매출에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EU 차원에서는 미시행. EU는 2018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했으나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와 OECD 글로벌 조세 논의로 좌초
 - 최근 EU에서 재정 압박과 디지털 경제의 확장 등 이유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EU-미국 무역협상의 레버리지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가능성을 활용 가능
- 이러한 수단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여러 위험과 한계도 함께 존재
 - (수단) 무역장벽을 강화하더라도 미국만을 겨냥한 무역 장벽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모든 역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마련이 필요
 - *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는 (가상의) 소재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우회 또는 회피가 용이
 - ⇒ (위험) 이때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미국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경쟁 왜곡, 효율성·공급 다양성·후생 손실의 문제 발생
 - (수단) EU는 특정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예로 EU 반강압 규정(EU Anti-Coercion Instrument, EU ACI)을 법적 근거로 사용 가능
 - ⇒ (위험) 이는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 (수단) 현재 서비스무역장벽 문제는 EU 단일시장 내 서비스 시장 통합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
 - ⇒ (위험) EU가 서비스무역 시장을 추가 개방한다면, 이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위험 상존
- 동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 EU가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적의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

- 회원국별로 그 비용과 영향은 다르게 분담될 수 있지만, EU 차원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전송가능서비스 무역을 의제로 넓혀 협상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對미국 상품수지 대비 서비스수지 규모를 비교했을 때 서비스수지 규모 자체보다는 미국으로 향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증가 추세와 높은 의존도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
 -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 및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보다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훨씬 큰 상황
 - 2024년 한국의 서비스수지 중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39억 7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중 80%에 가까운 30억 980만 달러의 적자분을 미국이 차지
 - * 한국의 對EU 지식재산권사용료도 적자지만 4억 6,870만 달러로 미국보다 훨씬 작은 규모

[2024년 한국의 對美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경상수지(Current Account)	한국은행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상품수지(Balance of Goods)	1,089억8,500만 달러	662억500만 달러
서비스수지(Balance of Services)	-71억 7680만 달러	-115억 4,600만 달러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30억 980만 달러	-41억 2,800만 달러

참조: 국제수지(BOP)에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항목으로 분류. 서비스수지는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운송, 여행, 건설 등으로 세분류되나 상기 표에서는 편의상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만 보고

자료: 한국은행, BEA에서 저자 조사

- 보고서의 정책 제언처럼, 미국이 제기한 디지털 무역장벽 안건 중 제도적 보완이나 해결이 될 때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유화책 또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
 -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는 안건들에 대해 보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설계가 필요
 - *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NTE)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위치기반 데이터의 이전 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사용료 등을 제기
 - 미국-EU 간에 진행 중인 디지털 규제 관련 논의의 양상과 양측의 대응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디지털 관련 협상 시나리오로 참고할 필요

- EU가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미국의 빅테크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실제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와 미국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의 행방이 중요할 전망
 - DST 등 규제는 한국 IT 대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IT 기업들의 세부담 전가 과정에서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상존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포트폴리오투자 유입자본의 국적별 결정요인 분석” 『국제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2021),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가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8.6.~2025.8.20.)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美 관세국경보호청, 232조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확대(8.15)

- (주요 내용) 407개 HTSUS 코드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대상으로 신규 지정 (8.18일부 시행)

- 지정 품목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 232조 관세(50%) 적용(이외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15% 적용)

※ 자동차 부품, 태양광 셀 등 이미 다른 232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60개)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

- (평가) 美 산업계 요구에 따른 관세 대상 품목 추가 확대 가능성 불배제

-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도입된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첫 절차로 업계 신청(약 500건) 품목 대부분 승인

※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관계없이 화장품 등 금속 함량이 낮은 품목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 / 향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1월, 5월, 9월)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

- 신규 관세 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소재 사용 업체의 사전 대비(철강·알루미늄 함량 파악, 원산지 증명 등) 필요

※ 신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우리 기업 對美 수출액을 약 119억 달러(16조 5천억원)로 추정(미국의 해당 품목 對세계 수입의 5.8%) /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 냉장·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무역협회, 8.18)

■ 中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주요 기업, 과잉 경쟁 관련 조정 논의(8.13)

- (주요 내용) 8개 배터리 분리막 기업* 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율적 가격 규제 ▲생산력 관리 ▲생산 확대 잠정 중단 등 논의

* 상위안 소재, 중성 신소재, 후이창 신소재 등 8개 배터리 소재 기업 참석

- (평가) 중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과잉경쟁 단속 조치 이행 목적으로 평가

※ 배터리 산업 공급과잉 단속 기초 속에 최근 中 정부는 CATL의 리튬 광산 허가권 갱신 불허 / 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주요 산업의 감산 등 공급 개혁 방안 발표 전망(FT, 7.29).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8.6.	[투자] 국가세무총국, 해외투자자의 분배이익 재투자 세액공제 운영지침 및 적용 예시 발표 (7.31) :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재투자 시 정책적 혜택 강화
	8.11.	[리튬] Reuters, CATL의 중국 장시성 리튬 광산 생산 일시 중단 보도
	8.11.	[로봇] 장강상보, 2025년 상반기 중국 로봇산업 매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 보도
	8.12.	[미중관계] 정부, ▲24% 對美 관세 90일 유예 ▲4.4일자 일부 對美 비관세 조치* 90일간 유예 ▲4.9일자 일부 對美 비관세 조치** 해제 * 11개 美 기업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 및 16개 美 기업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 6개 美 기업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 및 12개 美 기업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8.13.	[제재] 상무부, EU 금융기관 대상 제재 조치 발표 : EU의 중국 금융기관 2곳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 EU 금융기관 2곳 대상 제재 조치 발표
	8.13.	[텅스텐] China Tungsten Online, 올해 주요 텅스텐 가격 누적 40% 상승 발표
	8.13.	[배터리] 中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주요 기업, 과잉 경쟁 관련 중요 합의 도출 : ▲자율적 가격 규제 ▲생산력 관리 ▲생산 확대 잠정 중단 등
	8.14.	[관세] 中 정부, 캐나다산 카놀라에 75.8% 관세 부과
	8.15.	[광물] FT, 중국 당국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및 관련 제품 대량 재고 비축 금지 통보 보도
8.17.	[반도체] SCMP,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AI 데이터센터에 중국산 칩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 의무화했다고 보도	
미국	8.6.	[관세] Trump 대통령, 對印 관세(8.27. 발효) 행정명령* 서명 :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직·간접 수입을 사유로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 ▲기타 러시아산 석유 직·간접 수입국들에 유사 관세 부과 프로세스 수립 *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8.6.	[반도체] Trump 대통령,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언급
	8.7.	[제재] 행정부, 이란 제재 회피 등 지원 개인 및 기업 대상 신규 제재 발표
	8.7.	[관세] Greer USTR 대표, 관세 정책의 배경 및 성과 설명 기고문 게재(NYT)
	8.8.	[정상회담] 美-아르멘-아제르 정상회담 개최 : Trump 대통령, 아르멘-아제르 평화 공동선언 서명식 주재
	8.10.	[반도체] FT, 엔비디아(H20 칩) 및 AMD(MI308 칩), 對中 반도체 수출 허가를 대가로 對中 판매 수익의 15%를 美 행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 보도
	8.11.	[관세] Politico, 美 정부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및 상호관세 관련 일본에 EU와 동일한 대우를 합의한 것으로 보도
	8.11.	[관세] Trump 대통령,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
	8.11.	[미중관계] 백악관, ‘미중 스톡홀름 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

국가	일자	내용
미국	8.11.	[미중관계] 백악관, 대중국 관세 90일 추가 유예 행정명령 발표
	8.13.	[우주] Trump 대통령, '상업 우주 경쟁 촉진*' 행정명령 서명 * Enabling Competition in the Commercial Space Industry
	8.13.	[디스플레이]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국 BOE社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제한적 수입금지 기간을 14년 8개월로 판정
	8.15.	[관세] 관세국경보호청(CBP),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 부과 대상 추가(8.18 시행)
	8.15.	[관세] 하원, 「Secure Trade Act」 발의 : 글로벌 최소 관세 10% 도입, 중국에 대한 단계별 관세 부과, 의회 역할 강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등
	8.19.	[반도체] Lutnick 상무장관,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Intel 지분 확보 필요성 제기(CNBC)
일본	8.8.	[관세] 닛케이, 美 정부의 對日 관세 수정 의향 보도
	8.12.	[주가] 닛케이 평균 주가, 4만 2,718엔 17전으로 사상 최고치 약 1년만 갱신 : ▲美 관세 정책의 불투명 개선 ▲엔저/달러高 등으로 최고치 기록
EU	8.14.	[반덤핑] 집행위, 한국산/대만산 ABS 수지 반덤핑 조사 관련 잠정 관세 부과 결정 관보 게재
캐나다	8.1.	[관세] 캐나다-미국 관세 합의 결렬 : 미국,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35% 관세 부과* * 부과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USM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한정
	8.5.	[관세] 카니 총리, 미국에 대한 일부 보복관세 철회 검토 의향 표명
	8.5.	[목재] 정부, 목재 산업 지원 및 제품-시장 다변화 촉진을 위한 12억 캐불 규모 지원책 발표
독일	8.4.	[철강] 클링바일 재무장관, 對美 철강 수출 쿼터제 도입 지지
스위스	8.10.	[계약] NZZ, 스위스 제약사 로슈 및 노바티스, 美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판매량 100%를 현지 생산 계획 보도
핀란드	8.8.	[신용등급] Fitch Ratings, 핀란드 신용등급 AA+→A로 하향 조정
베트남	8.4.	[전기차] 베트남 전기차 생산업체 빈패스트, 인도 Tamil Nadu주 전기차 조립공장 공식 개소
	8.11.	[정상회담]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인도	8.6.	[관세] Trump 대통령, 對인도 추가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對인도 상호관세율 50%로 상승(8.27) 예정
	8.16.	[철강] 무역구제총국(DGTR),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발표
이스라엘	8.6.	[AI] 이스라엘 총리 특별 자문기구, AI 육성 전략 보고서 발표 : ▲GPU 6만 장 확보 ▲AI 컴퓨팅 시설 설립 ▲AI 수요를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수정 등 권고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8.12.	[탄소] Trump 행정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채택 반대 성명 발표
독일	8.5.	[풍력] 연방경제에너지부,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회복탄력성 로드맵' 발표 : (목표) 2030년까지 영구자석의 30%, 2035년까지 50%를 대체 공급원에서 조달
	8.6.	[가스] 연방내각, 에너지산업법(EbWG) 개정안 승인 : 기업 및 소비자의 가스저장 부담금 면제로 가스 요금 인하 예정
칠레	8.6.	[원자력] 상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원전 관련 논의 재개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25-7호 (2025.4.11.)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안(OBBBA)과 경제안보 :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을 중심으로	최용호
	현안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유아름
	연구동향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임산호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5호 (2025.8.14.)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25-16호 (2025.8.26.)	분석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임산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